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 25.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영실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4항)
- 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5항)
- 다. 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오자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관련부서 : 기후에너지과
- 라. 입법예고 : 2024. 1. 16. ~ 1. 22.(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법령명의 정정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남양주시 에너지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 안 제21조 제4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한 사항
- 안 제21조 제5항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 그 밖에 현행 법령명목으로의 정비, 띄어쓰기 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4.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 2022.9.19.>

②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6.1.7.>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신설 2016.1.7>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7>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009.08.06, 2016.1.7>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2009.08.06, 2016.1.7, 2020. 5. 14.>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0. 5. 14.>

4. <삭제 2020. 5. 14.>

가. <삭제 2020. 5. 14.>

나. <삭제 2020. 5. 14.>

[제목개정 2016.1.7]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9.19.>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1.14.>

④ 공유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3.11.14>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항번호 변경 2013.11.14, 2022.9.19.>

1.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0. 5. 1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전부개정 2022.9.19.>
6.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전부개정 2022.9.19.>

제30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 발생이 매우 미미함.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비인 경우임.

4. 작성자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